

“2022년까지 러시아·몽골에 환경산업 수출 1조 달성”

북방경제협력추진, 신북방정책 점검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완료
나진항 개발 등 국제 제재 걸림돌

정부가 러시아와 몽골 등 북방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 및 식량 100만톤 확보와 한-유라시아 협력펀드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권기훈 신임 위원장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북방정책과 관련된 16대 추진과제와 56개 세부과제를 중간 점검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완료된 세부과제는 신성장 동력 분야의 몽골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이 48억 원을 들여 날라흐 지역에 친환경에너지타



권기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모 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 특별고문, 김민기 민간위원, 권 위원장, 이해정 민간위원. /연합뉴스

운을 조성했다. 이 타운은 몽골지역 광해(광물개발에 따른 오염)를 복구하고 풍력·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한반도 물류망과 전력망을 북방지역과 연계하는 방안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 3월과 8월 각각 중국횡단철도와 러시아 횡단철도 블록트레인 운행을 개시했다. 블록트레인은 열차 1량을 전세

계약해 기업 부품을 직통 수송하는 방식이다.

남북철도를 잇기 위해 경의선 전철화(문산~도라산) 사업을 착공하고 남북철도 공동조사도 진행 중이다.

해운·조선시장 개척을 위해 러시아 슬라비안카 항만 개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한·중·일·

러 공동연구에도 착수한 상태다.

반면, 나진항 복합개발과 광역두만개 발계획 등 소다자협력 과제는 국제 제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나온 중점과제와 함께 내년부터 북방지역으로의 환경산업과 농·수산업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적인 목표는 2022년까지 환경산업 수출 규모를 1조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국내 종량제·분리배출 정책과 시스템이 발달했고 상수도·폐기물 인프라 기술이 우수한 만큼 이를 북방지역 국가에 전파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러시아는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7위 수준이지만, 재활용률은 7%에 그쳐 폐기물 관련 협력이 가능하다. 몽골의 경우 국내 대기 질 관리·모니터링 시스템을 공유하고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농·수산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농기자재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하고 식량 100만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농기업 진출 지역을 기존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와 흑해로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미콜라이프항에 곡물 수출터미널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유라시아 간 협력펀드도 조성된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예산에 한-유라시아 협력펀드 1차년도분 50억원을 반영했고 2022년까지 금융기관 등과 함께 총 1억 달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인프라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북방지역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현재 신북방정책은 남북관계 변화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연계성이 큰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202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 교역액 300억달러, 인적 교류 1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GP 20곳 시험철수... 남북 상호검증 완료

(감시초소)

軍, 65년만에 MDL내 오솔길 조성
양측 현장검증반, GP 철수 검증



강원도 철원 중부전선에서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검증반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군인들이 12일 65년 만에 새로 만들어진 오솔길을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GP(감시초소)를 방문해 철수 상황을 검증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시범철수 검증대상인 감시초소는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남북 각각 11개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다.

파괴되지 않은 남북 각각 1개 감시초소는 병력과 장비는 철수되지만, 원형은 보존된다. 이날 오전 11개소로 편성된 우리측 현장검증반은 북측 GP까지 연결된 오솔길을 따라 이동해 오전 9시께 MDL(군사분계선)에서 북측 인원들과 만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폭 1~2m의 오솔길은 이번 GP 시범철수 현장검증을 위해 새로 개척한 남북 통로”라며 “오늘 오전 9시께 오솔길과 군사분계선이 만나는 11개 지점에서 남북 GP 시범철수 현장검증반

이 만나 북측 GP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11개소의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난 곳에는 군사분계선이라고 쓰인 노란 팻말과 황색기가 설치됐다.

국방부 공동취재단이 촬영한 중부전선의 우리측 현장검증반은 방탄헬멧에 노란띠를 두르고 형광색 조끼를 입은 병력의 경호하에 북측 현장검증반과 만났다.

이는 상호 간 오인사격을 막기 위한 ‘비밀표식’으로 과거 동해선 연결 공사 당시

에도 남북 양측은 상호 간의 비표를 사용한다.

군사분계선에서 약간의 답소를 나눈 양측 현장검증반은 흰색 경시줄이 설치된 오솔길을 따라 북측 GP로 이동했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이 DMZ(비무장지대)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경호임무는 북한 병력으로 전환됐다.

우리측 현장검증반의 북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이 끝나면 같은 방식으로 북측 현장검증반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측 인원과 만나 남측 시범철수 GP 현장검증을 실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검증반은 △각 GP의 화기 및 장비 △감시소를 비롯한 지상시설물과 지하 통로 및 입구 차단벽 등 지하시설의 매물·파괴 상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일각에서는 “우리측 보다 더 많은 전연전단(북한 GP)을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시범철수 후 군사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큰 군사적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을 소집,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하는 긴급 점검회의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시설 사고, 무관용 원칙 따를 것”

성윤모 산업부장관, 안전관리대책

최근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과 고양 저유소 화재 등 에너지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공공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성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자원 분야 31개 공공기관장, 대한송유관공사 사장과 함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대책과 겨울철 전력수급 대비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향후 공공기관별 이행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에너지시설 교체투자에 대해 예산과 세제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노력을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때 산업부와 에너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교도소 수감자 미성년 자녀 생계 지원

법무부, 자녀 2만여명 달해
내년부터 보호시스템 마련

법무부는 내년부터 교정시설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지난 10월 자체 조사한 결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가 1만3834건(자녀수 2만1765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모 이외에 조부모, 친인척 등이 양육하는 경우가 4250건(자녀수 6636명)이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750가구(자녀수 1209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법무부는 수용자의 자녀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정위원과 사회단체, 교정 공무원 직원회 등을 통해 생계지원, 자녀 학자금지원, 상담 등 보호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와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완비해, 체계적인 수용자 자녀 정보관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 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한다.

/이범종 기자 joker@

6·25 전사자 유해 365위 국방부, 현충원에 봉안

한국전쟁(6·25) 전몰 국군전사자 유해 365위가 1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합동 봉안됐다. 이날 국방부는 “오전 10시 30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보훈단체 대표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합동 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봉안된 365위에는 전후방 각지에서 발굴된 288위와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발견된 유해 12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봉영한 64위, 지난 7월 13일 한미 상호 봉환행사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1위가 포함됐다. /문형철 기자

농식품부, 서울·경기지역 AI 방역 강화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항원이 검출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방역 강화에 나섰다.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아 AI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월별로 따져보면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이 나온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다소 증가했다. 다행히 아직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국 가축 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전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세종·최신용 기자